

장어 · 삼계탕 물렸거라 복날 ‘오리고기’ 납시오

G마켓 판매량 작년보다 80% 증가

입맛이 없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반복되는 폭우로 신체리듬은 이미 깨질 대로 깨졌다. 우리 조상들이 초복, 중복, 말복을 만들어 몸의 기운을 북돋는 보양식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장어, 삼계탕 등이 여름철 보양식의 대표주자지만 최근엔 오리고기가 ‘다크호스’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이 올 상반기 오리고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판매량만 총 12만마리다. G마켓은 오리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복날을 일주일 앞둔 11일 하루 동안 ‘웰빙 훈제오리 800*2팩’을 1만8900원에 5000세트 한정 판매한다. 보양식으로 제격인 훈제오리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G마켓 상품개발팀 서희선 팀장은 “오는 18일 복날을 앞두고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오리고기를 특가에 선보이게 됐다”면서 “믿을 수 있는 훈제 오리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웰빙 훈제오리’ 세트는 100% 국내산으로 만들었고, 슬라이스 형태라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 적당하다. 전자레인지로 3~4분가량 익혀 먹거나 불판, 오븐 등에 구운 후 기호에 따라 신선한 야채

와 함께 먹어도 좋다. 특히 오리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부추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오리고기는 비만 및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이 풍부해 성장기 발육촉진, 갱년기 장애 예방에도 제격이다. 수용성 기름이 풍부해 피부미용 효과도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최근 건강식품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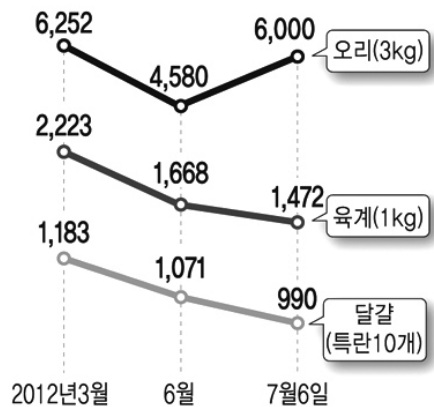
G마켓에서 ‘복날오리’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포커스신문사 김지혜 기자 2012. 07. 10

집중기획 / 위기의 축산업... 대책은 (4)닭 · 오리

물량 · 가격 ‘널뛰기’ 악순환

산지 닭·달걀·오리값 (단위:원)



자료: 닭·달걀·농협중앙회, 오리·한국오리협회

닭·오리 산업에도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닭고기·달걀·오리고기 등 가금산물의 가격이 치솟는가 싶다가도 금세 공급이 늘어 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거의 매년 반복돼 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물량부족으로 산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농가 입식열기 고조→종계업자 병아리 생산 적극 가담→수입업자 수입 확대→산지 닭값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산란계·오리도 마찬가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육계 사육마릿수는 3월 7,266만마리에서 5월엔 9,885만마리, 7월에는 1억2,620만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7~8월은 닭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지만 이 같은 마릿수는 1년 전 7월에 비해 5.4%나 늘어난 것으로 생산 과잉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말 6,243만마리였던 것이 올 3·4분기엔 6,500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오리 사육마릿수도 1,309만마리(3월 기준)로, 1년 만에 52.8%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육마릿수가 이처럼 증가하는데도 닭·오리고기의 수입은 꾸준히 이뤄져 국내산과 외국산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올 들어 5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5만7,64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290t)에 비해 27.2% 늘어났다. 오리고기는 4월 말까지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한 1,375t으로 조사됐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산 달걀 가공품 수입량도 4월 말까지 38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나 증가

했다.

현재 냉동창고에 비축된 닭고기 재고량은 1년 전보다 무려 68.4%나 늘어난 781만마리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오리고기 재고 역시 1,000만마리 정도는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닭·오리·달걀 가격은 널뛰기를 하는 것처럼 심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3월 평균 2,223원까지 올랐던 산지 육계값(1kg 기준)은 이후 꾸준히 빠져 7월6일 현재 1,500원을 밑돌고 있다. 달걀값(특란 10개) 역시 990원 선에 머물러 있다. 오리값(3kg)도 지난해 평균 7,527원 하던 것이 6월 4,500원선까지 푹 떨어지기도 했다. 가금수급안 정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가금산물의 수입 관세까지 낮아진 것은 국내 닭·오리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금산물 가격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닭·오리 산업이 FTA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가금산물의 수급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또한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고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절충안 ‘수용불가’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경부가 축산업계의 요구를 감안한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축산업계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성) 주최로 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방종식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축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되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추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방 과장은 “축산농가들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인 틀에는 변화가 없지만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사안별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폐쇄명령 시행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해 건폐율 초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시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배출시설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하되 신규시설은 개정안보다 강화하고 기존시설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대해선 과밀사육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방 과장은 “지금까지 이런 논의와 토의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가들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다음달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당초 계획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이날 축산농가의 반발은 더욱 극심했다.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은 “현 정부는 모든 환경오염의 원인을 축산농가에서 찾고 있다”면서 “해양투기 금지 시행시에도 농가들은 충분히 양보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번번히 농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축산분뇨 문제를 농가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고 방치한 정부에 대한 원망도 이어졌다.

송용현 서울우유 조합장은 “축산분뇨 문제는 198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농가만을 탓하고 있다”며 “생업을 포기하라는 수준으로 규제는 강화하면서 관계부처간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척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도 “생업을 영위하

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밤낮을 뛰어 온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벌금 3억원을 과징하는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느냐”며 “가축분뇨법 개정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강행할 시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환경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처간 협의와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모든 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잘하는 농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단체와 부처간의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2. 7. 10

19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 여야 19명으로 구성

3선의 최규성 의원 위원장 맡아...
위원들 18대 때보다 증량감

3선의 최규성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완주)이 위원장 <사진>으로 선출돼 운영을 이끌 제19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9명의 여야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19명의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통합민주당 소속 8명, 통합

19대 국회 전반기 농식품위 위원

※ 소속 정당 및 기타다 순(정당별 간서는 면 앞)



최규성 위원장
민주통합당
전북 김제·완주



김재원 간사
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형성



경대수
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근태
새누리당
충남 부여·청양



신성범
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



윤영리
새누리당
미래대표



장유식
새누리당
경북 영주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울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



황명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평성



김영록 간사
새누리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승남
민주통합당
전남 고흥·보성



김유남
민주통합당
제주



김훈진
민주통합당
전북 고창·무안



박민수
민주통합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배기운
민주통합당
전남 나주·화순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남 광흥·강진·영암



김선동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



이인제
신진통합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진보당과 신진통합당 소속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최규성 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민청학련·민통련 등에 몸담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17대 총선 때 부인 이경숙 의원(비례 대표)과 나란히 국회에 입성, 화제에 올랐었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농림해양수산위원, 18대 전반기에 농림수산물위원회 민주당 간사, 2009년엔 민주당 농어업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어 농업·농촌에 대한 인연과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새누리당 간사로 활약할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제31회 행정고시 및 36회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 후 관계에 투신, 내무부·국무총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거쳐 17대 국회 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민주통합당 간사로 활약할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8대 때 대표 발의한 법안만 53개에 달할 정도로 의정활동이 활발했다. 제19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9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은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을 비롯해 김근태(충남 부여·청양)△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윤명희(비례대표)△장윤석(경북 영주)△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홍문표(충남 홍성·예산)△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 등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은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김우남(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김춘진(전북 고창·부안)△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배기운(전남 나주·화순)△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 등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위원은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 선진통합당 소속 위원은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다.

축산경제신문 이준영 전문기자 2012. 07. 13

축산농가 절반이 무허가 축사 보유 '어쩌나'

무허가 축사의 실태가 기존에 나온 조사결과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가 60개 시군 전업규모 6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가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농협중앙회 50명, 농식품부 10명 등 6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60개 시군 전업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49.5%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축종은 오리로 72.5%가 무허가였고, 육계 62%, 낙농 54%, 한우 42%, 산란계 35%였다. 양돈은 16%로 가장 무허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전업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2차로 전업미만 규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 대표는 “현행 건축법은 사람이 사는 건축물과 축사가 같은 기준으로 돼 축사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무허가축사의 보유현황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사를 A·B·C·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보완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고, D그룹에 해당하는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올 여름 복날, 오리가 ‘진짜 보양식’

삼계탕에 비해 칼로리 적어 ‘새강자 등극’

오는 18일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메뉴를 고심 중이라면, 올해는 삼계탕이나 장어 대신 오리고기를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에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 몸의 양기를 보충한다는 복날의 의미는 일찌감치 다가온 무더위 탓에 그 의미가 다소 줄었지만, 가족들의 원기회복으로서의 의미는 여전하다. 하지만 보신탕, 삼계탕, 장어 같은 고단백의 대표적 보양식은 오히려 살을 찌우는 탓에 부담스럽기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육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오리가 제격이다. 오리 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어 비만 걱정을 덜 수 있고, 삼계탕에 견줘 칼로리가 적어 ‘진짜 보양식’으로 불릴 만하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오리고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하며 총 12만 마리가 판매돼 상반기 히트상품에 오를 정도다.

과연 오리의 효능은 무엇이길래, 이처럼 여름 보양식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일까.

◇오리는 팔방미인 스태미너식

오리고기는 고기에 대한 부담이 큰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스태미너 식품이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타 육류와 달리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과 아라키돈산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함량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노완섭 동국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주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먹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고혈압 환자가 적은 이유는 오리고기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선호하는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식습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중국 최고의 미식이 서태후가 미용식으로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리고기는 비만 예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부노화 막고, 탄력 살리는 다이어트식

주요 육류가 산성인데 반해 오리고기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체액이 산성화 되는 것을 막는다. 이

덕분에 피부노화를 방지해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시켜 주며 특히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미용에 좋다. 이같은 특징은 오리고기 기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오리고기 기름에는 육류 중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혈액에 쌓여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등 순환계 질환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산과는 달리 혈액 내 쌓여있는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상온에서 잘 굳는 포화지방산과는 달리 불포화지방산은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 오리기름은 실제로 상온에 두었을 때 타 육류의 기름과 달리 굳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동물유전공학연구실이 2007년 육류별 지방산 조성 비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경우 타 육류와 달리 오리고기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중금속 해독하는 ‘디톡스’식품

오리의 뇌에는 해독작용을 하는 뇌수가 있어 독극물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해 각종 공해 및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오리고기를 먹으면 공해독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보통 육류의 혈액요소질소(BUN)는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 후 남는 질소가 암모니아로 합성돼 체내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데, 암모니아로 합성되기 전 질소의 농도를 측정했다.

앞서 건국대 동물유전공학연구실 임상실험결과, 체내 독소(CRE)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리육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독)하여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성

인병 예방효과에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오리육이 신장 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밖에도 오리고기는 비타민C, B1, B2의 함량이 높아 지구력향상, 집중력저하를 막아주어 학생 수험생에게 좋을 뿐 아니라 칼슘, 인, 칼륨, 철 등 미네랄 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어린이 성장발육에 도움을 주는 좋다.

일간투데이 김보람 기자 2012. 07. 16

농업생산액 전년비 1.6% 늘듯

농경연 상반기 농업경제전망

2012년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4.8% 증가한 3,160만원에 달하고 농업생산액도 전년보다 1.6% 증가한 45조7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2년 상반기 농업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소득도 2012년 906만원에서 2022년 956만원으로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12년 농가인구는 전년 296만명보다 2.2% 감소한 290만명에 달하고 2017년 262만명, 2022년 232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인구 가운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8%, 2017년 5.1%, 2022년 4.5%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68만

9000ha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162만9000ha, 2022년 158만6000ha로 예상되지만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12년 1.47ha로 전년보다 0.5%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5조7280억원으로 추산되는 농업생산액 가운데 재배업 부문은 곡물류(쌀 제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업 부문은 한육우와 육계, 낙농부문은 생산액이 증가하는 반면 양돈, 산란계 등은 생산액이 감소해 전년보다 0.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농업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부문 총소득은 10조30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배업과 축산업은 각각 8조2140억원과 1조7890억원으로 추산되고 향후 농업부문 총소득은 2017년 9조3850억원, 2022년 9조214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2012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한 291만두로 추정되고 돼지와 육계는 각각 전년대보다 7.6%와 1.3% 상승한 939만두, 8811만수로 추정된다. 한육우와 젓소 사육두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의 사육두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 한육우는 2022년 254만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는 2022년 965만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민 신문 이영주 기자 2012. 7. 19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품관원, 기동 단속반원 250명 투입 8월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이하 품관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7월 16일~7월 25일)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2단계는(7월 26일~8월 10일)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품관원은 올해 상반기 연인원 4만 2341명을 투입해 16만 1476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256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한 1457개소는 형사입건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06개소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584건), 쇠고기(413건), 배추김치(389건), 쌀(246건), 화훼류(91건), 표고버섯(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2012. 07. 19

국회 농식품위, 농식품부 업무보고 시작 활동 돌입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13개안’ 추진현황 집중 점검할 듯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오는 24일 첫 활동에 나선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3일간에 걸쳐 농식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FTA=여야정이 합의한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정부가 13개 대책 중 4개 대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톤 트럭 면세유 대상에서 어업용만 제외했고 축산발전기금은 2조5000원에서 2조원

으로 5000억원 삭감했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도 제외했다. 축산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부문에서 공제두수를 돼지의 경우 당초 500두에서 1000두로 늘리기로 했지만 700두로 줄였고 닭과 오리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시행한 이후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졸속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신경분리 실행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백억에 이르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조항의 검토도 없이 무작정 신경분리를 추진한 농협에 대한 비난과 함께 즉각적인 원인규명, 책임자 문책,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재해재난 방지=가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리시설 설계빈도 연장, 친환경 경수리시설 확충, 4대강과 저수지간 연계, 농업용수용 저수지 수질개선 등 중장기적인 재해재난 방지 계획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확대도 논의될 전망이다.

▲농사용 전기적용=농사용 전기 확대 대상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 전망이다. 한·미 FTA의 추가보완대책으로 산지유통센터의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키로 했지만 한국전력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력적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마른김 가공공장에 대해 기존의 농사용 전기요금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한데 대한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일몰연장=농림수산식품분야의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12. 7. 23

“정부 차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축산물 수출 확대 뒷받침해야”



농식품부 수출대책회의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서규용 장관 주재로 제8차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축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수출 대상 주요국들의 수입위생조건을 점검해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검역 조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18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제8차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규용 장관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수출 전문 도계장과 현지 냉동보관창고 마련 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우리 제품 인지도 낮아 마케팅 비용 지원 시급

▲축산물 수출 활성화하려면=축산물 수출은 기존 시장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으로 수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축산물 수출액은 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0만달러에 비해 25.2% 늘어난 상태. 특히 조제분유를 중심으로 한 낙농분야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도 물량은 많지 않지만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양유업 관계자는 “2007년부터 조제분유 수출을 시작했는데 연평균 50%의 성장을 이어왔고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특히 중국의 조제분유 시장은 4조 원 가량으로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이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큰 만큼 150개가 넘는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진

입장벽과 리스크 또한 크다”며 “현재는 개별 업체 별로 유제품 시장 현황자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유 관기관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 박 병철 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일본의 대형마트 86개소에서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품 시식회를 열 었는데 어떤 날은 판매량이 3개에 불과한 적도 있 었다”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 은 상태로 수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수출 전용 도계장 구축 검역문제 해결 급선무

▲검역 문제도 점검해야=이와 함께 수출 업계에 서는 수출 대상국의 검역 문제도 하루 빨리 해결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순금 코리아더카드 대표는 “오리털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이 되지만 부산물은 정식 절차를 거쳐 들어가지 못하고 있 다” 며 “오리 부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버리고 있지만 중국에선 큰 시장인 만큼 검역상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창호 오리협 회 회장도 “일본의 경우에는 오리고기가 수출되다 AI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다” 며 “지난해 9월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만큼 하루빨리 수출이 재개 되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한 업계에서는 미국, 중국 등의 닭고기 및 육가공 제품의 수출 개방 시기를 단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산란도태계의 수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 장이다. 산란도태계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면 국

내 산란계 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최근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에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 유로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 김준형 싱크 린푸드 대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전용 전문 도계장이 없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며 “또 산란도태계의 경우 냉동으로 유통되는데 베트남 등 현지 냉동창고가 열악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 전문 도 계장을 만들어야 산란계와 토종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도계장을 인수해 현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축산물 수출을 위해 정부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수출 업체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 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업계와 공유되도록 하 고 수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입맛에 맞는 테스 트를 실시해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12. 7. 23

오리산업, 2010년 농림액 생산액의 7위 ‘폭발적 증가’

2005년 대비 2010년 171% 상승

오리산업이 2010년 농림액 생산액의 7위를 점유, 오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 점이다.

24일 농촌진흥청의 ‘오리 이야기-보양식, 그 이

상의 가치'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 쇠고기 소비량은 31%, 돼지고기 8%, 닭고기는 42% 증가한 반면 오리고기는 171%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기준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소 8.8kg, 돼지 19.2kg, 닭 10.7kg, 오리 2.45kg으로 다른 육류에 비해 낮아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오리산업은 국내 수요의 확대에 따라 사육수수의 증가와 사육가구의 전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생산액은 1990년 375억원에서 2010년 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고 2010년 농림업 생산액의 7위를 점유했다.

1997년 중국산 오리 수입제한 조치 이후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전업화와 계열화가 진행, 농가당 사육수수는 1990년 81마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940마리, 2010년에는 2808마리로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시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오리 HACCP 지정업체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리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오리고기가 조리하기 어렵다거나 비싸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메뉴와 조리법 개발, 가정소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육이나 가공육 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 FTA 등을 앞두고 국내외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기반을 정비해 품질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맞춤형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주요 축

종으로 부상한 오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며 오리의 육종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를 강화해 오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2012. 07. 24

동남아·미주지역 AI 발생... 방역 강화키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남아 및 미주지역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공항 및 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가금농가 차단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홍콩 등 동남아 뿐 아니라 멕시코 등 미주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준하는 차단방역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중국, 홍콩 노선에 검역탐지견 투입을 강화하는 한편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의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4개반 72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 점검반을 가동해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외 취약지역인 항만에 대한 검역검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부터 해양경찰청, 세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AI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 선원 및 남은 음식물에 대한 소독과 휴대품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번과 같이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다”며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키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AI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2012. 7. 24

국제곡물가 가뭄 영향 연초 대비 19.5~51.8% 급등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연초 대비 19.5~51.8%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당 기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은 미산 옥수수의 경우 현물로 운임료가 포함된 가격(C&F)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톤당 386달러를 기록해 지난 1월 323달러 보다 19.5% 상승했다. 특히 대두와 대두박, 사료용 소맥은 톤당 각각

679달러, 627달러, 330달러를 기록해 연초 대비 30.6%와 51.8%, 19.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올 들어 전체 지역의 55%가 가뭄 현상을 보이면서 1956년 이후 최악의 가뭄을 보이고 있는 데다 향후 2주간 가뭄 해소가 쉽지 않아 연간 옥수수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당초 올 들어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은 4.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대두는 파종면적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극심한 가뭄 여파로 수확량 환산기준 옥수수는 15.7%, 대두는 9.8%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해상운임을 제외한 선물가격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펀드 과매수에 따른 가격조정 가능성과 곡물 수요감소 가능성 등으로 국제 사료원료가격이 하락할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외부 금융시장 요인을 압도하는 웨더마켓 장세를 연출할 경우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 2012. 7. 24

축사기준 축종별 적합하게 개선”

서 장관, 국회 농식품위 출석
“무허가 축사문제 근본적 해결” 밝혀
오리 하우스사육 문제 없어
축분뇨 질소기준 연차별 강화

관련법 현실맞게 개정 총력



서규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지난 24일 무허가 축사를 무조건 양성화하기 보다는 각 축종별로 적합한 축사 기준을 정해 관계부처와 협의,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의 총 질소 정화방류기준 250mg(리터당)은 신규축사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강화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에 출석,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홍문표 의원(새누리, 충남 예산·홍성)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부안·고창)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무허가 축사를 지난 '92년에 양성화해 준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무허가 축사를 무조건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 장관은 그러나 환경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를 유형별로 파악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어 오리의 경우 하우스에서 사육해도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 축종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홍문표 의원이 질의한 한·미FTA로 수혜를 보는 계층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무역이득을 환원하자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원출처보다는 지원규모와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다소 미묘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한·중FTA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우려에, 1단계 협상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단계별 협상에서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민감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김우남 의원·김영록 의원이 정부와 농협이 MOU를 체결한 것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취소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2012.07.25

국제곡물가 연일 상승... 쌀 카드 마땅치 않아

서규용 장관, 긴급 업계 간담회 개최 대책 마련 부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5일 국제 곡물가 급등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관련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기관별 대응방안, 곡물 확보상황,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다.

국제 곡물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손에 잡힐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곡물가격이 연일 급등하며, 콩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서규용 장관 주재로 7월 25일 오전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영향이 국내에 파급되기 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2008년 애그플레이션 때 추진했던 사료 및 화학비료 구입자금 지원, 밀과 콩에 대한 할당관세 및 무관세화, 쌀가루를 밀가루에 섞어 사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을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한돈협회 등 축산생산자 단체와 사료·제분·전분당·대두가공 협회 등 곡물 관련 수입 가공 협회, 농협사료, 농식품유통공사, KREI, 소비자단체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해 국제곡물가 상승의 국내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업계들은 올해에 사용할 곡물의 대부분을 확보(밀·콩·옥수수 1426만톤 중 1385만톤)한 만큼 올 하반기까지는 국제곡물가 상승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 전망했다.

콩과 옥수수는 12월 가공물량까지, 밀은 11월 가공물량까지 7월 이후 최소 4~5개월분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곡물가 변동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4~7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만큼 곡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2013년 초부터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5일 국제곡물가 급등 대응 관계기관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제곡물 관측시스템 시범가동(12.7.25), 식용수입콩 정부 판매가격(1,020원/kg) 고정 및 국산콩 생산 확대(14만톤), 군급식용(1만톤)주정용(2.5만톤)으로 국산밀 수요 확충,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수입곡물사료 대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요시 08년 애그플레이션 때 추진했던 사료 및 화학비료 구매 자금 지원, 밀과 콩의 할당관세 무관세화, 쌀가루를 이용한 밀가루 대체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생산여력과 자급률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 우리 콩과 밀 생산 확대 및 수요기반 강화, 갈대 등 국내부존 조사료 자원 발굴활용 등도 추가로 추진하고 쌀 이외 밀과 콩·옥수수까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콜옵션 등을 통해 곡물을 매입한 후 가격 상승시 오르기 전의 가격(매수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을 활용한 수입곡물가격 안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내 곡물유통망 확보는 국제 곡물 시장이 활황인 점을 감안할 때 유통시설 매물이 적고 고가로 매입할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종 대책은 간담회 의견 수렴 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곡물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관련 업계와의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보완하는 등 곡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2012.07.25

서울시, 닭·오리고기 업소 5곳 위생불량 적발

여름철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50곳 중 5곳이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내 닭·오리고기를 파는 업소 50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해서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는 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발견 즉시 압류했고, 유통 중인 제품들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총 53건의 닭·오리고기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항균물질, 부패도 등 98개의 검사항목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점검 결과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46곳 중 80%가 201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닭·오리고기를 포장하지 않으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원산지나 보관방법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여란 기자 2012. 07. 26

농식품부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 등을 골자로 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입장 개진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의원(민주통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환경부 입장대로라면 무허가 축사가 1~2년 사이에 없어지는데 무조건 무허가 축사라 해서 유예기간에만 봐주고 철거한다는 것은 심한 처사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새누리, 홍성·예산)도 “축산현안으로 사료, 질병, 유통구조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특히 환경부가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려 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깊은 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1992년에 무허가 축사를 현실화 시킨 바 있다”며 “또다시 무허가 축사를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축종별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방류수수질기준도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선 개정안 대로 T-N(총 질소) 250ppm이하를 적용하되 기존 축사는 연차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12. 7. 26